

해외농업개발 지원방안 연구

I.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	4
II. 해외농업개발의 현황과 문제점	6
III. 해외농업개발 사례 및 일본의 정책	10
IV.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현황	14
V. 향후 해외농업개발 방향 및 당행의 역할 ·	12

작성 : 선임연구원 양종서 (3779-6679)
flydon@koreaexim.go.kr
인턴연구원 이미지 (3779-5328)
확인 : 실장 안상술 (3779-6679)
ssahn@koreaexim.go.kr

< 요약 >

1.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

- ☐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와 많은 인구에 의하여 식량자급률이 낮고 기후변화 등에 의한 식량 위기에 취약한 특성이 있음
- ☐ 바이오에너지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위한 원료확보도 거의 해외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임
- 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이 필수적임

2. 해외농업개발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실적은 미진한 수준임
 - 해외농업개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됨
- ☐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현지 자원을 확보한다 하여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기 위한 인프라의 미비 문제가 있고 또한 식량 위기시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있음
- ☐ 농업대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으나 토지가격이 높아 경제성의 문제가 있으며 기존 상권과의 마찰도 우려됨
- ☐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
 - 중국 및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농장형 투자
 - 전라남도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의 MOU - 술라웨시주에서 바다를 포함한 115만ha의 용지를 무상임대
 - 베트남에 우수한 씨감자기술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내 제과업체가 이를 수입

3. 일본의 해외농업 개발정책

- ☐ 일본은 과거 ODA 원조와 이를 통한 정보를 기반으로 종합상사가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☐ 일본정부는 2009년 5월 '식량안전보장을 위한 해외투자 촉진에 관한 회의'를 발족하고 당시까지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을 선회

- 일본정부는 공금융, ODA,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체계화

4. 향후 해외농업 개발 방향

- ☐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, **ODA**, 금융기관, 농업기술 보유기관의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함
- ☐ 해외농업개발은 현지국과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 제공과 상호 협력을 통한 개발모델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
 - 정부는 현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힘써야 하며, 자금지원을 포함한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필요
 - 지방정부도 현지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
 - ODA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등 지원 필요

5.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 당행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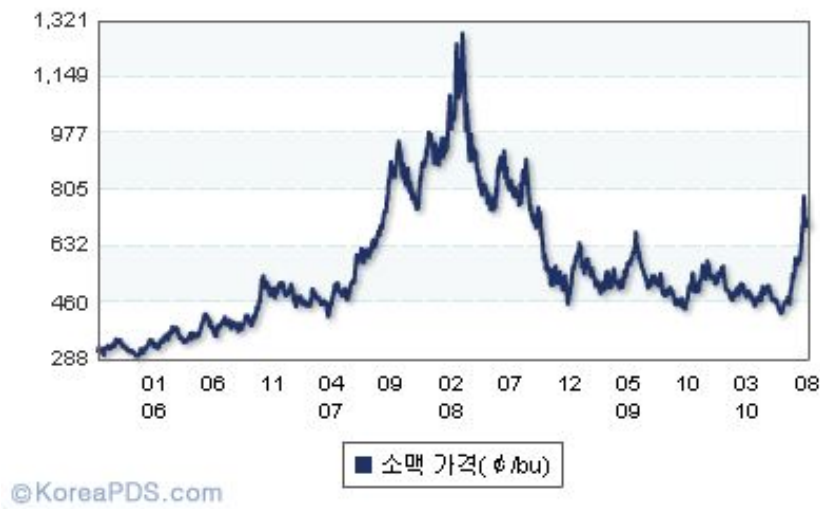
- ☐ 당행도 현재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식량안보 및 바이오 자원확보라는 국가적 문제로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☐ 우선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개발을 우선 지원하되, 지방정부, 농업기술보유기관, **ODA**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
- ☐ 농장 및 시설 설립에 따른 초창기의 자금수요에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
- ☐ 중소기업의 유통형 사업도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
- ☐ 해외농업개발은 대상국가, 사업형태,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하여 국책은행으로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

I.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

-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에 많은 인구에 의하여 식량자급률이 극히 낮고 식량위기에 대한 대처가 취약한 상황임
 - 2008년을 기준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은 26.2%로 자급이 가능한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인 밀, 콩, 옥수수의 경우 자급도는 5% 내외에 불과한 실정임
 - 현재 매년 약 1,4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곡류 수입액은 2008년 44.8억달러에 이름
- 2007~2008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는 곡물가 폭등에 의한 식량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기상이변, 바이오에너지로의 사용 등으로 식량위기의 재발 위험은 어느 때 보다 높음
 - 2008년을 전후하여 대두, 밀, 옥수수의 가격은 2년 만에 약 170%, 260%, 160%씩 각각 상승하는 위기를 나타내었으며, 금융위기 이후 경기 하강에 따라 현재는 하향 안정화 됨
 - 그러나 지구상에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고, 전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식량의 에너지자원화 압력이 증가할 경우 식량 위기는 단기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음

< 주요 곡류 가격 추이 >





자료 : Korea PDS

- 식량위기 발생시 식량자급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도 수출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와 같이 자급률이 부족한 국가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에 놓인 바 있음
- 유가의 상승에 따라 향후 에너지와 플라스틱이 바이오작물로부터 추출될 가능성이 높아 식량 뿐 아니라 바이오 작물 확보에 있어서도 원료확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
- 이미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국내에서 활용할 작물이 마땅치 않은 실정임

- 또한, 내열성을 제외하고 이미 상당한 기술수준에 와있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옥수수 등 농작물의 단백질로부터 추출되어 향후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가 상승시 매우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
-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바이오작물의 자급은 거의 0에 가까워 미래의 석유 대체에 있어서도 역시 해외에 의존하여야 하는 위기상황에 있음
- 식량위기에 대비한 부족 식량자원 확보, 향후의 바이오 원료 확보 등을 위하여 유일한 대안은 해외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
-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는 경제성보다도 우선하는 문제이나 국제 통상의 제약이나 외교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이 앞장서는 형태로 최대한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

II. 해외농업개발의 현황과 문제점

1. 개발 유형

- 해외에서 식량이나 원료작물을 조달하기 위한 개발 방법에는 농장형, 유통형, 혼합형 등¹⁾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음
- 농장형은 현지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직접생산을 통하여 농작물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처분하는 형태의 개발임
 - 현지국가의 법령에 따라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임차 형태로 토지이용권을 획득
 -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관리임대 형태로 대리경작 또는 위탁생산도 가능
 - 해외 농작물의 확실한 획득이 가능하나 가격의 변동, 기후 리스크

1) 허장 외(2009), “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 (1/3차연도)”,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등 직접 경작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하고 저장, 운송 등 관련 인프라의 건설문제도 부담

□ 유통형은 직접경작 보다는 현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수집하거나 저장, 건조, 가공, 유통하는 생산 후 단계에 참여하여 해외 농작물을 획득하는 형태임

- 농지의 임차여부, 건조공장, 가공공장 등 설비의 구비, 단순 유통 등 참여단계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
- 직접경작에 따른 리스크는 피할 수 있으나 현지의 상황, 시장 상황, 현지국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 획득의 실패 가능성도 있음

□ 혼합형은 농장형과 유통형을 병행하는 형태의 개발로 농장형으로 진출한 후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고 유통형으로 진출하는 경우나 반대의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존재

2. 진출 현황

□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실패를 거듭하였고 1990년대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체계화되었음²⁾

- 1960~1970년대는 주로 정부주도로 해외농지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를 경작할 이민자들을 모집하는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졌음
 - 그러나 토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검토의 미흡으로 경작에 부적합 토지 구입이 많았고 이민자들도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은 경우가 많아 초창기의 실패를 경험함
- 80년대에는 70년대의 잇따른 실패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로 해외 농업개발 자체가 추진되지 못하였음
- 1990년대부터 다시 옛 소련지역이나 중국 지역으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, 2000년대에 들어서 자원확보와

2) 허장 외(2009), “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 (1/3차연도)”,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식량안보 이슈가 대두되면서 지원이 체계화되기 시작함

□ 해외농업개발 지원의 체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 실적은 미진한 수준임

-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 현재 활동 중인 경우는 총 695건이며 평균 투자비는 87.6만 달러 수준으로 총 6억달러 규모로 추정
-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인용하면 우리나라의 2009년도 총 해외투자금액은 194.4억달러로 이중 농림어업 부문의 투자액은 6,578만 달러로 전체의 0.3%에 불과

< 연도별, 지역별 진출현황 추이 >

(단위 : 건)

	아시아	유럽	아메리카	오세아니아	합계
1970년대 이전	6	0	2	0	8
1980년대	1	0	5	7	13
1990년대	86	16	23	27	152
2000년대	222	21	243	36	522
합계	315	37	273	70	695

자료 : 허장 외, “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확보 방안”, 한국농촌경제연구원(2009)

3. 해외진출 실적 부진의 원인

- 식량 및 바이오원료 등 자원확보의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한 데에는 해외진출 활동이 본격화된 기간이 짧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더욱 큼
- 우선, 정부의 입장에서는 해외농업개발 지원이 현지국의 자원민족주의와 신식민주의라는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커 본격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
- UN 등 국제적인 해외농업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이를 준수할 암묵적인 의무가 외교적으로 존재하여 일방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는 어려움

- 기업 등 민간의 입장에서는 기후와 현지토양, 시장, 국가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다른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
 - 유통형의 경우에도 이미 전 세계 어떠한 농지를 막론하고 수확물을 유통하는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기존 질서를 뒤엎고 상권을 획득하는 것은 민간기관 단독으로는 어려움이 있음

4. 자원확보의 어려움

- 정부와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임하여 농장이나 유통경로를 확보하였다 하여도 식량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농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음
-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의 문제가 있으며 식량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수출제한조치와 같은 폐쇄적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큼
 - 곡물가격이 폭등한 2007년 이후 한시적으로나마 러시아, 중국, 아르헨티나, 우크라이나, 파키스탄 등이 곡물에 수출세를 부과한 바 있고, 세르비아, 인도 등은 일부 곡물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도 실행
 -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개발의 경우 비상시에 실제로 국내에 농작물이 반입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
- 정책적 리스크 외에도 개발도상국은 농작물을 수송할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
 -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촌지역이 낙후된 곳이 많아 농작물을 수송할 도로, 항만, 공항 시설이 부족하여 농업개발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기가 쉽지 않음
- 농업대국들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가진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비싼 토지대금,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을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음

- 미국, 캐나다, 아르헨티나, 브라질 등의 농업 대국은 식량위기 시 농작물 반입은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수월하며 국가리스크도 낮으나 토지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
- 곡물메이저가 장악한 지역에 있어서는 곡물 수입을 위한 항만 시설 사용이 통제를 받는 등 기존 상권과의 마찰도 예상되어 이에 대한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

III. 해외농업 개발 사례 및 일본의 정책

1. 국내 대기업 사례

< 한국기업 해외농장 개발 현황 >

한국기업, 해외농장 확보 및 추진 현황 (자료: 각 업체)



자료 : 네이버카페, '아시아영농투자개발'

-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중국 및 연해주를 중심으로 농장형 개발 사례가 많음
- 해외농업개발의 사유는 원료확보의 목적도 있으나 에너지작물 등 신규사업의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

2. 지방정부의 지원 사례

- 전라남도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는 2009년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술라웨시주의 바다양식장 100만ha를 포함한 총 115만ha의 농수산업 용지 무상임대와 전남도 민간기업의 투자를 약속
 - 100만ha의 바다양식장은 바이오에탄올용 우뭇가사리를 생산하고 나머지 농지는 옥수수, 팥, 산림조림지로 활용 계획
 - 아직까지 부지의 정확한 위치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업의 투자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
 - 현재 전남도와 민간기업의 간의 진출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
- 조선일보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사례는 국내 시도 지방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외에 농수산업 기지를 마련한 사례이며 향후 보완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음
 - 해외 농업개발에 있어서 현지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와 자칫하면 일어날 수 있는 진출기업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감은 민간기업에 있어서 어려운 걸림돌 중 하나임
 - 이러한 지방정부간의 교류에 의한 상호 협력은 향후 해외 농업개발에 있어서 더욱 확산시켜야 할 모델로 사료됨

3. 농업기술보급 병행 사례

- 강원대는 대학에서 개발한 우수한 씨감자기술을 베트남에 보급하여 우수한 감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국내 제과업체가 가공용 감자원료로 수입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
 - 강원대학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수한 씨감자기술을 중국산 불량 씨감자로 생산성이 낮았던 베트남에 보급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현지 컨설팅과 지도를 통하여 생산성을 크게 확대
 - 이렇게 품질이 높아지고 생산량이 증가된 감자를 국내 업체인

오리온이 가공식품용 감자원료로 재수입하여 국위선양과 원료확보 두가지의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음

4. 일본의 해외농업 개발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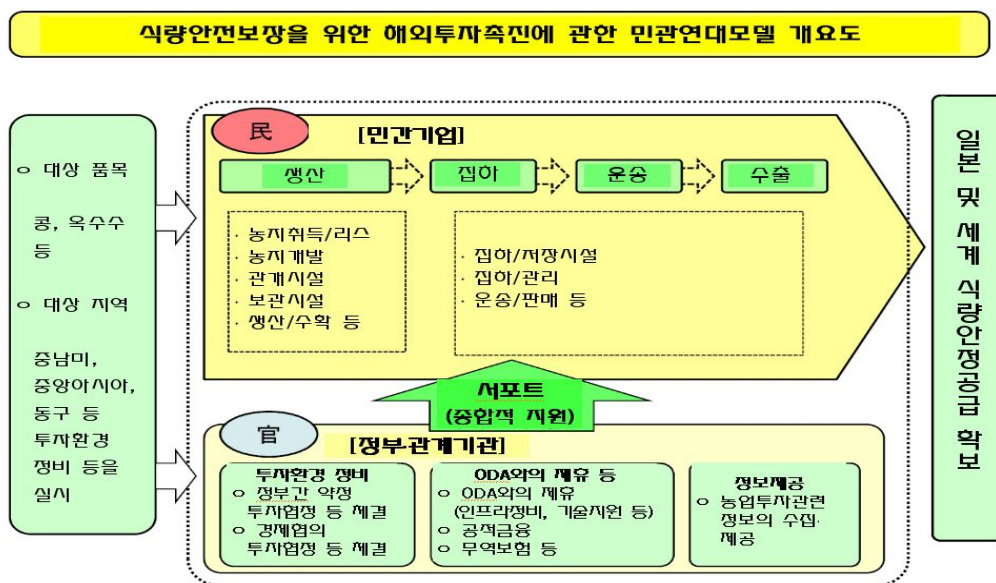
- 국토가 협소하고 식량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자원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미 1960년대부터 이를 위한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알려짐
- 과거 일본의 해외 식량자원 확보는 ODA를 적극 활용하고 주로 종합상사들의 유통형 개발을 통한 자원확보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 -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 일본의 해외식량자원 확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, ODA 활동의 결과와 현지 정보들을 종합상사에 연계시켜 종합상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원확보에 임한 것으로 알려짐
 - 이들 종합상사들은 이미 일본 전체에 대한 충분한 식량 공급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
- 일본정부는 2009년 4월 '식량안전보장을 위한 해외투자촉진에 관한 회의(해외농업투자촉진회의)'를 발족³⁾
 - 동 회의는 일본의 식량안정공급 및 세계적 식량증산을 위한 일본의 해외농업투자 촉진방안의 수립을 목적으로 함
 - 회의의 참가자는 외무성, 농림수산업성, 재무성, 경제산업성, JICA, JBIC, JETRO 및 NEXI의 담당국장, 심의관급이며, 별도로 과장급의 간사회를 설치함
- 동 회의는 5회에 걸친 회의결과를 종합하여, 2009. 8. 20자로 '식량안전보장을 위한 해외투자촉진에 관한 지침'을 수립·공표함
 - 그동안 일본정부는 해외 농지매수에 대해서는 국내 농림업 보호

3) 관련 내용은 동경사무소가 조사하여 제공한 내용임

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, 상기 지침의 수립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함.

- 농지의 취득·리스, 농지개발, 집하·저장시설 설치 등은 민간이 실시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은 종합지원창구를 설치, 투자환경의 정비, ODA와의 제휴,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기로 함
- 현재 일본기업으로는 미쓰이 물산이 브라질 농업기업을 매수, 약 11헥타르 규모의 농지에서 유럽수출용 대두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며, 현재 종합지원창구에 몇 건의 상담이 진행중임

<일본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지원 개요>



자료 : 동경사무소

- 일본의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농업 개발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특히 ODA까지도 활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도 주목할 만함
- 이러한 체계 안에는 공적금융을 포함한 자금부문까지도 역할이 주어져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이러한 지원체계는 빈곤퇴치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UN 밀레니엄 선언이나 기타 국제 원조 동향과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조할만한 사례가 될 것임

IV.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현황

- 우리 정부도 해외 농업자원 확대를 위하여 2009년 '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'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국내 주요 곡물 수입량의 10%에 해당하는 138만톤을 해외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움

- 매년 일정규모의 자금을 농어촌공사와 산림청을 통하여 지원

- 농어촌공사를 통한 자금지원 개요는 다음과 같음

- 지원대상 :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되고 해외 농지의 임차 또는 매입으로 농지를 기 확보한 사업자

- 지원 규모 : 2010년 총 210억원 예산

- 지원 기준 : 국내 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소요사업비의 70%까지 지원

- 지원 조건 : 총 상환기간 10년(3년거치 7년 상환), 연리 2%

- 산림청을 통한 자금지원 개요는 다음과 같음

- 지원자격 :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해외 산림조성을 위한 임야가 확보된 사업자

- 지원 규모 : 2010년 총 178억원 예산

- 지원 기준 : 산림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0%까지 지원

- 지원 조건 : 총 상환기간 최대 25년, 연리 1.5%

-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담보 설정 후 지원

- 현재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전략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본과 유사하게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자금 지원을 제외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협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

- 현재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사실상 민간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관들은 더욱 큰 규모의 자금지원이나 외교적 노력, 정보제공 등 더 많은 역할을 정부에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

V. 향후 해외농업개발 방향 및 당행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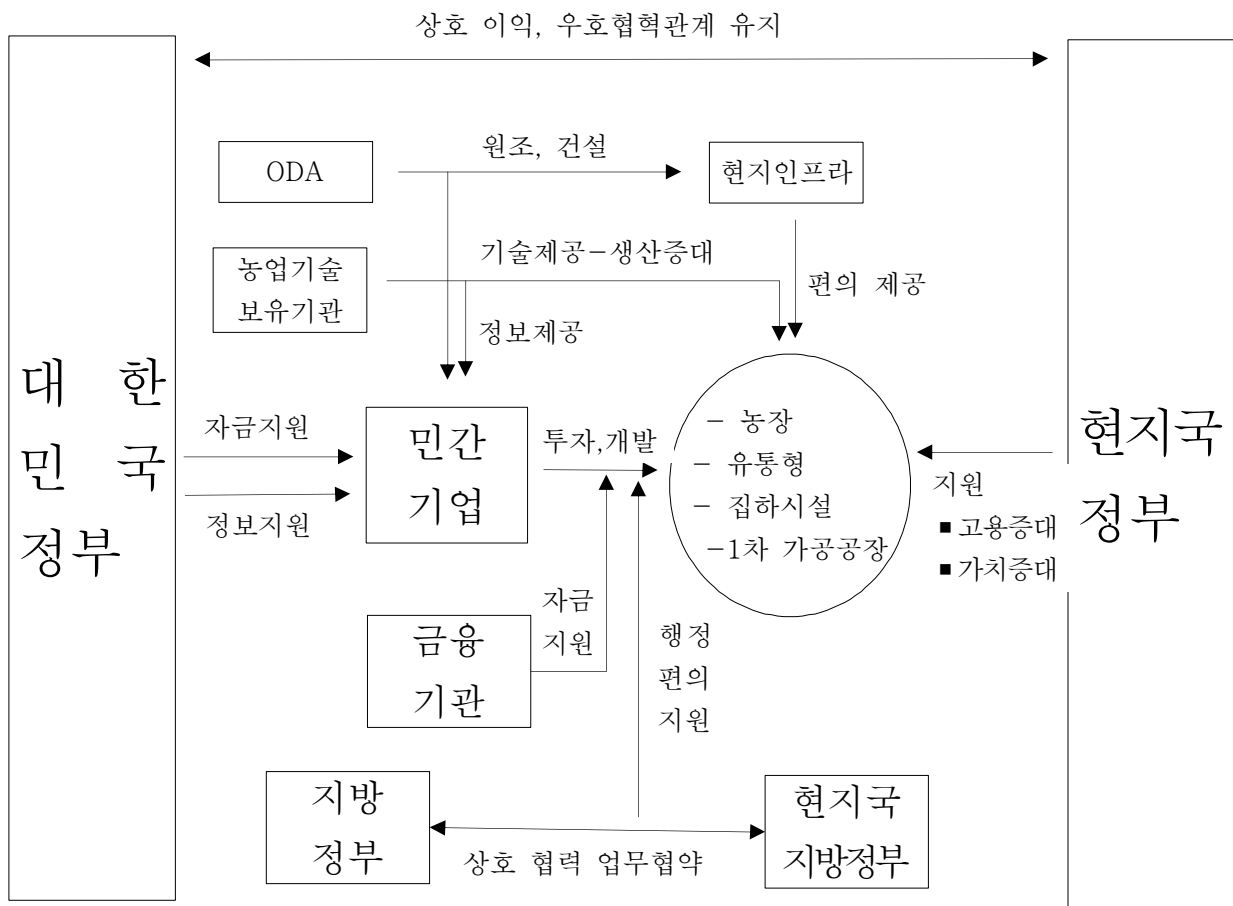
1. 향후 바람직한 농업개발의 방향

- 해외농업개발은 식량자원이 결부되어 현지국의 정서 등 매우 민감한 문제들로 인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관련기관의 총체적 협력 필요
 - 자본을 앞세워 저개발국의 농장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행태는 현지 주민들에게 큰 반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지국의 정책에 반영될 경우 비상시 국내 반입이 어려울 수도 있음
 - 이러한 문제는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있어 우리 정부는 표면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노력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는 분위기임
 - 성공적인 해외농업개발과 비상시의 자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지국에도 도움이 되는 상호이익과 우호적 관계가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소극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또한, 성공적인 해외농업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책임진 민간기업에 대하여 공공부문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의 총력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
- 정부의 역할은 현재의 국제적인 농업개발 및 협력의 정서를 고려할 때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현실이나 해외농업개발 민간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
 -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대상국 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,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나 그 외에도 일본의 지원 모델을 참조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나 산림청을 통한 자금지원이 예산의 한계 등으로 부족한 현실이므로 공적금융과의 연계성을 높여 필요한

자금회전을 위한 추가적 증자 또는 예산 배당 등의 조치 필요

- 그 외에도 ODA의 정보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정보지원 서비스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

< 해외농업개발 전략 >



- 해외농업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 전수를 통하여 현지국의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증대된 생산량의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는 형태의 협력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

- 현지국과의 상호이익은 식량자원 유출 등에 따른 현지국의 반감을 줄이고 비상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반드시 이러한 전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임

-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상호이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, 베트남 씨감자 사업과 같은 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임
-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증대된 식량이나 바이오 작물의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식량위기 등 비상시 현지국의 엄격한 통제를 줄일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임
-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산하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각 대학, 영농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과 장려책을 통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기술제공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임

□ **지방정부도 국내 민간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해외농업 개발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**

- 전남의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와의 MOU 사례는 좋은 모범 case가 될 것으로 보임
- 해외 농업개발을 담당하는 국내 대기업의 한 직원은 지방정부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MOU 체결 이후에도 대상국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등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함
- 향후에도 국내 지방정부는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표면적 실적 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

□ **ODA도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현지정보 제공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이 될 것임**

- ODA가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되겠으나 ODA도 정부의 지원서비스에 포함시킨 일본 정부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
- 아직은 ODA의 초기이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과 농업개발과 연계된 인프라구축 등을 시행한다면

해외 농업개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임

2. 당행의 역할

- 당행은 자원개발금융의 일환으로 현재 해외농업개발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'식량자원 및 대체 에너지자원'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낮은 수익성과 높은 리스크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원모델을 다양화 하는 등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
- 우선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개발을 우선 지원하되, 지방 정부, 농업기술보유기관, ODA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
 - 국내의 우수한 농업기술이 제공되는 유통형 및 농장형 사업은 생산량 증대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현지국 주민들의 호감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
 - 여기에 지방정부간 교류에 의한 행정적 지원은 리스크를 더욱 더 감소시킬 수 있음
- 당행은 농장 및 시설 설립에 따른 초창기의 자금수요에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
 -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은 조건 면에서 유리하나, 대상이 이미 토지나 시설을 확보한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고 금액도 최대 20~30억 정도 규모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족한 수준임
 - 그러므로 당행은 토지확보나 유통형 사업을 위한 시설재 자금 등 사업 초창기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스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
-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의 유통형 사업도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

- 농촌경제연구소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, 동남아 개도국의 경우 작은 투자로도 가능한 유통형 사업이 많이 있음
 - 일례로, 캄보디아의 옥수수 수확시기는 우기와 겹치는데 건조장의 미비로 옥수수가 비에 젖어 헐값의 사료용 옥수수로 태국상인에게 팔리는 경우가 많음
 - 이러한 사례는 수억원의 건조장 건립 투자만으로도 현지인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싼 가격으로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 줌
 - 당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리스크가 큰 농장형 사업보다는 이러한 소규모 투자로 가능한 유통형 사업을 권장하며 국내 담보확보를 통한 자금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해외농업개발은 대상국가, 사업형태,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의 참여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을 개발하여 국책은행으로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